

전문성·대표성 강화된 제2기 탄녹위 출범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2.24) 개최 -

- 장기('31~'49년) 감축 등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녹색성장 가속화 추진
 -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진행 상황 공유·논의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월 24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22.10.~)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25.2.~)하게 된 것이다.

* ▲붙임 1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붙임 2 : 위원회 위원 명단

○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 ▲여성 비율(1기21%→ 2기39%), 청년 비율(1기3%→ 2기8%)

□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고 밝혔다.

○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지구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목표
 -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한편, 탄녹위는 위원회의 정책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오늘 논의된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하며, 우리나라는 ‘21.12월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
 - * 2030 NDC 제출경과 : ‘17년 대비 24.4% 감축(‘20.12월, 최초 제출) → ‘18년 대비 40% 감축(‘21.12월, 상향 제출)

3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 역대 최대 열대야(서울 48일, 제주 75일), 117년만의 11월 최대 폭설 등(‘24년, 기상청)
-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이하 ‘제4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전 과정(수립-이행-평가)에 걸쳐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 전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24.12.23),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4.12월~, 월 1회)·정책협의회 ('25.5월-8월 예정), 전문가 자문단 포럼('25.2~, 월 1회 예정), 대국민 토론회('25.7월 예정) → 탄녹위 심의('25.4분기 예정)

□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 하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 그 밖에도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 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다.

□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 지자체·지역사회, 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포럼

담당 <안건1>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책임자	과 장	손선미 (044-200-1916)
		담당자	서기관	이상훈 (044-200-1917)
<안건2>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책임자	과 장	염정섭 (044-201-6640)
		담당자	사무관	류형관 (044-201-6647)
<안건3>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1-6950)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1-6965)



-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5.4 시행)에 근거

- (소속 및 기능)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기본법 제16조)

* 핵심 국정과제를 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 관련 기능을 수행하여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

<<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2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위촉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기본법 제15조 제8항)

** △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시행령 제11조 제2항), △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11조 제3항)

- (분과위 등 설치)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기본법 제19조 제1항)

□ 위원 구성(58명) : 위원장(총리·민간) + 위촉직 위원(35명) + 당연직 위원(21명)
 (위촉직 위원은 가나다 순)

구 분		소 속	
1	위 촉 직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2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 태양광연구단 단장
3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책임연구원
4		김선주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 교수
5		김혜진	홍익대 과학기술대학 교수
6		류광남	뉴톤(주) 대표이사
7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8		박경식	농협중앙회 이사
9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10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11		백은경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 컴퓨터공학과 초빙교수
12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 연구기획조정본부 본부장
13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14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15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16		양의석	(사)CF연합 사무국장
17		유가영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18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19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20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ESG연구소 소장
21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22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23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24		이정인	한국에너지기술연 국가기후기술센터 센터장
25		이종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26		이호섭	한국CCUS추진단 단장
27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8		장희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29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30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31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32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3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4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35		하지원	(사)에코나우 대표
36		함진기	(주)글래스돔코리아 대표

구 분		소 속
37	당 연 직	국무총리(위원장)
38		기획재정부장관
39		교육부장관
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1		외교부장관
42		통일부장관
43		행정안전부장관
4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7		보건복지부장관
48		환경부장관
49		고용노동부장관
50		여성가족부장관
51		국토교통부장관
52		해양수산부장관
5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5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55		국무조정실장
56		금융위원회위원장
57		산림청장
58		기상청장